
<사 후 보도 자료>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차별금지법제정 전북행동 기자회견

지금 여기 인권의 약속,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 일시 :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전라북도의회 앞

○ 기자회견 발언 [발언내용 첨부]

- 김형선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 유승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한상구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비대위원

- 김동규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무처장

- 권지현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센터장

○ 주최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참가단위 (무순) : (사)생명평화마중물,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군산여성의전화, 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시민행동21,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참여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기본소득당(준), 전북녹색연합,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예수살기,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등학부모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여성의전화, 전주여성주의독서모임리본, 정의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책방 토닥토닥, 페미니즘학회동행 (41개 단위)

<기자회견문>

지금 여기 인권의 약속,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이 세상에 외쳐진지 72년이 되는 날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두 번의 세계대전이 만들어낸 참혹함과 폐허를 반성하며 인간의 존엄을 세우기 위한 약속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72년 전, 세계인권선의 외침으로 인권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선언 이후 폭력과 차별, 불평등에 맞서 수많은 민중들의 행동과 실천이 있었기에 인권은 보편의 약속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은 얼마만큼 실현되었는가. 72년 전 유엔 총회에서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의 1조와 2조를 다시 읽어본다.

-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존엄'과 '평등', '차별금지'는 인권의 약속의 기초이기에 선언에도 가장 먼저 등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가치를 말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인권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평등사회의 출발점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투쟁을 통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법률 대부분이 특정 사유에 의한 차별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고용 등 한정된 영역에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가 아닌 다양한 면으로 구성된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차별과 혐오의 문제 역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괄적인 차별금지 사유를 담고 있지만 구제 수단은 권고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의 포괄적인 차별의 경험을 온전하게 다루면서 효과적인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더욱이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한 차별과 혐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차별과 혐오의 문

제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우리 사회의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외국인을 향하던 혐오는 곧 특정 집단과 지역, 개인으로 옮겨졌다. 누구도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감염된 '사람'의 정체성이 문제인 것처럼 비난과 혐오의 낙인 찍기가 반복되었다. 재난상황에서 대응의 대상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으로 바뀌었다. '감염과 완치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보다 양성이란 이유로 주변의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렵다'는 코로나19 인식조사 결과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은 계속되고 있지만 차별과 혐오에 대한 사회적 방역이 작동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평등해야 안전하다"는 가치를 다시 외친다. 차별과 혐오의 낙인의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 아픔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염병에 걸린 채 치료받지 못한다면, 모두의 건강에 위험, 보건의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두려움 없이 이야기하고 검사하고 치료받는 분위기에야 사회가 안전할 수 있다. 차별과 혐오의 폭력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코로나19 시대의 '민생'이다. 우리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중에'가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오늘, 세계인권선언은 미사여구 속에서 기념되는 것이 아닌 우리 삶과 사회에 단단하게 뿌리 내리는 약속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와 이웃의 안전과 삶이 차별과 혐오라는 폭력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통해 차별과 혐오를 방치하는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닌 존엄과 평등, 차별금지가 보장되는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여기 인권의 약속,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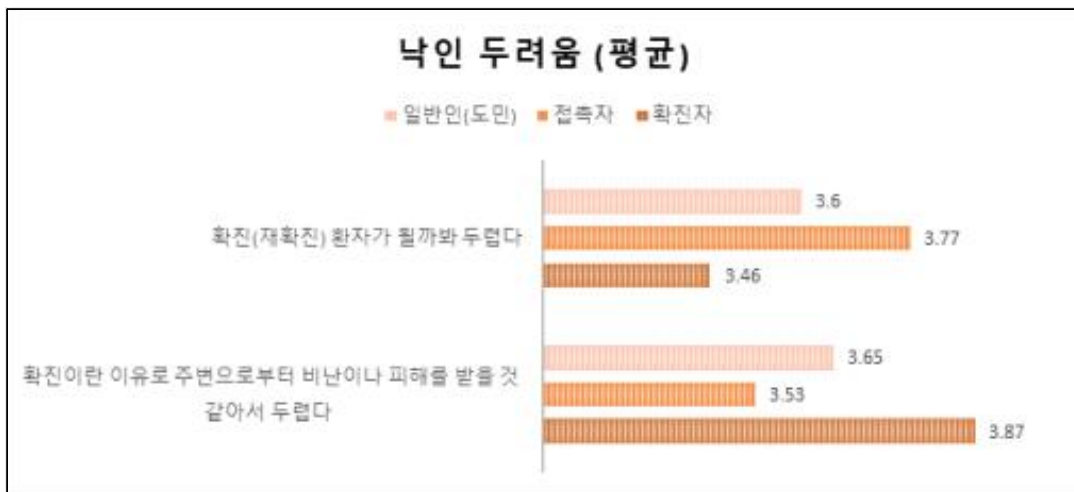
차별금지법제정 전북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 『코로나19 확진자·접촉자 인식 조사』 <코로나19 낙인 두려움>

-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이희영)·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 공동 조사결과 중 발췌 (발표 2020.7.1.)
- 응답자는 경기도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총 1,498명(확진자 110명, 접촉자 1,388명)

[낙인 두려움]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완치되지 못할 수 있다는 상황 두려움 (2.75점), 또는 완치 후 다시 감염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3.46점)보다 확진을 이유로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과 피해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87점).

-접촉자들의 경우는 감염 확진이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고 (3.77 점), 접촉자란 이유로 주변으로부터 비난과 피해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3.53점)이 그 다음이었다. 이를 비슷한 시기에 동일 문항으로 측정한 일반인(경기도민 2,589명)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확진자의 주변의 비난과 피해 두려움 (3.87점)이 일반인(3.65점)이나 접촉자(3.53)점보다 높고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첨부] 김형선 전북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발언내용

여성들이 요구한다! 성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조속히 제정하라!

2018년 미투운동을 통해 그리고 최근까지도 전북지역에서 여성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성희롱, 성폭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로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공직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터져나온 여성들의 고발은 근본적인 사회구조의 변화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난 해 4월 11일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여성에게 죄를 묻는 낙태죄는 임신중지라는 표현이 바람직하며, 임신중지의 권리는 차별과 폭력 없는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와 연결됩니다. “낙태죄 완전폐지는 임부의 처벌이 아니라, 어떻게 보다 안전하게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나갈 것인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일하는 노동현장에서 경험하는 성별 임금격차, 채용, 승진에 대한 차별,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은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노동자가 아니라 남성은 핵심인력, 여성은 보조인력이라는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사회, 공동체가 책무를 갖고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성이 경험하는 복합차별을 다루기 위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며 ‘여성’으로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 임신 또는 출산을 하거나 하지 않은 여성으로, 여성이자 장애인으로, 이주민으로, 성소수자로, 청소년으로 존재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복합적이며 다층적인 정체성으로 여성들이 경험해온 차별을 드러내고, 이를 차별문제로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성차별·성희롱이 없는 직장, 성차별이 없는 학교, 혐오 없는 미디어 표현, 성평등이 당연한 일상을 원하는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여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여성들이 요구한다. 국회는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첨부] 유승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 발언내용

오늘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 전라북도의 장애인 인권은 죽었습니다.

무주 하은의집 장애인 인권 침해 당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폭행당한 시설에 갇혀 살아가고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개인적 주제적 삶을 살아 보지 못하고, 지역사회와 동떨어져 살아가는 게 마치 당연하다는 것처럼 지내는 게 과연 맞는 건지요? 그래서 무주하은의집전국대책위는 장애인도 차별 없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말을 하는 것이고 전라북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에 위반 된 일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부당한 요구를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주 하은의집 시설에 있는 사람들도 차별 받지 않고 살아 갈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도 묵인하고 단 한 번도 천막 찾아온 적도 없고, 도의회 의원들도 바로 코앞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추위를 떨어 가면서 정당한 인권을 지켜 달라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한다, 애쓴다, 우리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격려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소수당 제외한 제 일당이라는 도의원들이고 전라북도 인권센터입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행정에 말 잘 듣고 행정이 하라는 대로 따르는 곳은 인권이 있고, 행정과 대등한 관계로 임하는 곳은 인권을 묵인하는 것이야 말로 차별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또한 아침부터 도청과 도의회 중간 사이에서 앰프로 음악을 틀어 놓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소음으로 업무 방해 된다고 합니다. 이걸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 좀 들어달라는 또 하나의 절규이자 외침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차별에 저항하여 무주 하은의집 폐쇄, 장애인 탈시설 기본계획 수립 될 때까지 천막농성 이어 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시설 밖의 삶이 당연한 것이 되도록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첨부] 기자회견 사진

